

SIES 월레토론(24.2)

한국경제의 과제

발제: 김용복

현재

성장률 저하

불포용

미래

경제 위축
사회적 갈등, 대립



- 경제위기
- 민생불안

한국경제의 당면 과제

1. 경제위기 가능성 차단과 민생불안 해소 - 부동산 PF / 가계, 기업 부채 / 생활물가 / 재정
2.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차단과 전환 - 노동력, TFT, 산업통상정책
3.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경로로 전환 - 노동, 복지, 환경정책

<부동산 PF 부실>

부동산 PF: 토지(계약금+잔금)+인허가 → [브리지론(2금융권) 청산 + 공사비] → 착공, 계약금·중도금 → 준공
* 시공사 - 준공 협약 + 보증

* 땅값 + 금융비용 + 공사비 등 vs. 분양대금

→ 고금리, 부동산 불황기 도래 - 위기의 반복

○ 버티기 vs. 구조조정

- 버티기: 금리 인하, 분양 회복 때까지
. 금리 부담 → 수익성 ↓ → 실패할 수도

- 공경매: 구매자는 낮은 원가 → 성공 가능성 ↑
. 금융기관, 시공사 등 손실 → 금융으로 전이?

○ 부동산 PF의 혼란 반복 차단

- 한국 PF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

- . PF 러쉬 - (시행사) 토지 계약금도 대출, 제한된 손실과 막대한 이익, (제2금융권) 시공사 등 신용보강 믿고 고수익 노려
 - . 미국은 주로 토지를 자기자본으로 구입, 공사비는 외부 의존 / 한국은 토지대금+사업비 모두 외부와 수분양자에 의존..
- (시행사) 토지 확보? 자기자본비중 규제? (제2금융권) 부동산 PF 대출의 규제? (수분양자) 후분양?

<가계 및 기업 부채>

- (IMF, Global Debt Database) 22년말 현재 GDP 대비 가계부채 108.1%, 비금융법인부채 119.6%
. 26개국 2위, 가장 빠른 증가 속도(20, 21년 급증)

○ 가계부채 대책

-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안정 대책이어야 함에도, 정부는 부동산을 경기 지지하는 정책으로 이용
. 금리 인하 압박, 특례보증자리론, 50년 만기 주담대, 종부세 재산세 감세, DSR 예외 확대 → 부채 ↑
. 정부 가계 부채 대응 방향: "가계부채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율 이내로"
- 부동산 정책 방향: 부동산 가격의 급변 막는 방향으로
1) 부동산 세제 2) DSR, DTI 제도의 안정적 운용 3) 한은 Countercyclical 통화정책 강화

○ 기업부채 대책

- 원인: 경기부진 + 부동산 PF 등
. 23.6말 현재 이자보상배율 1 미만 = 44.8%(중소기업 58.8%), 한계기업 17.2%(e-daily 240117)
- 정부 대책: 미루기(만기 연장, 이자 유예)
- 중소기업 지원 강화 vs. 구조 조정?
. 21년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회복 비율 36.6%, 3년 22.6%, 7년 이상 9.9% / 보조금 많을수록 기업실적 안 좋아
. 구조조정 - 기술 및 업종 고려, 사회안전망, 인수합병?

<생활물가>

- 21년 이후 CPI 총지수와 생활물가지수의 괴리 커져
- 대책
 - . 정부 - 개별가격 관리. 유류세 인하, 저소득층 지원금 지급, 공공요금의 원가 반영 시기 조정
 - . 기본 방향 - 생활 필수 물품·서비스를 부담 없이 이용 + 시장 기능의 유지 + 환경 등 악영향x
 - 1) 생필품 보조금 (예: 농수산물 가격 지원)?
 - 2) (보편적) 기본서비스제?

<재정 확보>

- 정부: 건전 재정 + 감세 → 재정의 축소 균형 지향(기업, 부자 부담 축소)
 - 정부 할 일(경기 침체 대응, 분배 개선, 신기술·신산업 지원) 못하고, 실생활 영향 가시화
- 대책: 감세 환원 / 증세해서 정부 지출 확대 주장?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
 - . 세원 확대하되 로드맵 제시? 사회보장 목적세?
 - . 대안 재정준칙?
 - . 지방재정 어떻게 보완?

<잠재성장률 추락 저지>

- 한국의 성장 요인

- . 자본투입의 기여율이 높은 특징.
- . 2011년 이후 성장률 감소는 노동과 자본 투입 감소에 기인 (주52시간제, 인구감소 / 구성- 저임 증가, 고임 감소)
- . TFT 증가 속도 빠른 편이나 여전히 자본의 기여율 높아 (일본; 노동 기여율 -, TFT 기여율 커)

- 노동 투입

- 1) 출산 - 지원금? 주택? 출산휴가 자동화, 의무화? / 개인주의화? 자기 발전? / 아이의 미래?
- 2) 여성, 노인 - 양질 일자리?
- 3) 이주노동자 - 양적 확대 그러나 여전히 차별 및 혐오. 고급 인력 확보?

- 총요소생산성

- 1) R&D 투자, 신기술신산업 지원 - 반도체 집중? 신산업의 경쟁력이 하락
- 2) 규제 합리화(국회입법 규제영향평가)
- 3) 벤처 창업, 인력 양성

- 북방 배제 등 가치 중심의 산업통상정책?

<노동정책 전환>

- 정부의 '노동개혁' 방향

. 기업 수익성 위주의 경제 활력 증시: 노동시간(주52시간제 완화), 안전(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), 임금(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, 최저임금 상승 억제), 노조(노란봉투법, 무리한 법치, 회계투명성..)

→ 노동자 생활 악화, 내수 위축, 사회적 분열, 기업의 합리화·생산성 향상 노력 저하

- 노동개혁 방향? 포용성(안전, 노동시간 축소, 임금) + 저출산고령화, 신기술·신산업 노동력

*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

. 고령화, 기술변화에 대응 vs. 초기업적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선행? 직무의 객관적 평가? 중고참 노동자의 반발?

* 비정규직: 정규직 정리해고 용이하게? 비중 축소가 능사? 동일노동동일임금제

<복지정책 전환>

- 정부의 복지 정책 기초:

- . 약자 선별 사회보장 정책

- . 복지 지출 소극적 - 지출 늘지만 자연증가분 고려시 실질적 축소, 지역사회통합 돌봄 시범사업, 공공임대주택, 공공병원 등 소극적)

- . 사회서비스의 시장화, 산업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 추진 -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민간기업 진입장벽 낮추려는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

- (보편적) 기본서비스제? 필수 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소비. 의료(건강보험 확대), 교육, 교통(기후동행카드?), 돌봄, 통신, 주택, 음식 등

- . 기본소득: 기존 시장체제 유지, 일자리 무대책, 재정문제 / 사회보장: 선별 비용

- . 여기에 관철은 일자리 창출 노력이 결합되면...

< 에너지 환경정책 전환 >

- 정부: CBAM, RE100의 영향 가시화에도 세계 흐름에 어긋나는 에너지 정책
 - . 2026년 NDC 20% 달성으로 목표 수정, RE100 대신 CFE 이니셔티브(CF 100) 추진
 - * 7/24 CFE(시간성) - 녹색프리미엄, REC의 불인정(역내성), 기존 원전은 배제(추가성)될 수도
 - 통상 불이익 + 기후 위기 관련 산업화에 도움 안돼
- 대응
 - . 에너지 요금 현실화 → 수요조절, 탄소산업 발전과 관련 일자리 창출
 - . 재생에너지 발전 사이트 확대 및 기술(태양광 효율 제고, 해양풍력 건설 비용 절감 기술)
 - . 여타 에너지 기술력 제고 - 청정수소 및 CCS 기술 능력 제고

-
- 성장률 제고 정책과 노동, 환경, 복지 정책 전환의 양립성?
 - .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?